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김옥안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5월 01일 (토)
제 256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남성·비장애인 중심성을 드러낸 법원의 판결
2.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다?
3.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논평> 남성·비장애인 중심성을 드러낸 법원의 판결

정신지체 2급 장애 청소년을 5년간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의 요지는 '때리거나 험박한 사실이 없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건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재판부가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재판부가 인정하는 성폭력이란 '정조관념이 투철한 순결한 여성이 목숨걸고 저항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한 사건'이라는 대단히 가부장적 가치관이 내포돼 있음을 다시금 확인케 한다. 이 소녀는 가해자가 '어머니와 오빠를 때렸던 것이 기억나서 무섭고 겁이 나 반항하지 않았고, 어떤 해악을 가할지 두려워 소리지르지 않았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이 소녀가 진술하는 성폭력의 경험은 '성폭력'이 아니라 말인가? '저항' 정도를 갖대로 삼는 재판부의 기준은 성폭력을 경험한 모든 여성에게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과 다름 없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여성이 경험하는 성폭력은 '권력'이라는 구조화된 성별(젠더)관계 속에 놓여 있다. 이 사건의 경우도 가해자(어머니 내연의 남자)와 소녀의 관계는 저항할 수 없는 위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저항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것은 성별화된 성폭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성주의 시각이다.

재판부가 재판부는 이 소녀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지만 읽고 쓰는 능력이 있고, 강간·낙태의 의미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성교육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었던 사실을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지능력이 있는 것'이 곧 '특정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이라는 재판부의 이해방식은 정신지체장애에 대한 몰이해이다. 이번 판결은 정신지체를 지닌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재판부의 '비장애인 중심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재판부의 무죄판결로 성폭력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게 됐고, 피해 여성은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됐다. 사법부는 말로만 '인권의 보루'를 논할 것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 및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바로 하고, 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라.

<기사 처음으로>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다?

'영낙원' 수용 노인, 갈비뼈 6대 부러지고 흉골 부위는 금이 가

복지시설에 수용된 한 노인이 수용 이틀만에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시설공동대위)는 30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생활자 인권보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김모 씨(69)가 가족에 의해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영낙원'에 입소한 날은 3월 28일. 피해자는 내과 진료를 위해 다른 생활자들과 함께 외부 병원진료를 받던 29일 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30일 오전 시설 관리자는 "가슴이 아프다"는 피해자의 말에 땀을 뺀 후 폭행사실을 확인했다.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는 진단 결과, 갈비뼈 6대가 부러졌고 흉골 부위가 금이 갔으며, 이마 한가운데와 왼쪽 턱 등 온몸에 쇠파이프나 각목으로 맞은 것으로 보이는 멍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치

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남원 시설장 박상모 목사는 "입소 전에 다친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라며 사과논커녕 시설 내 폭행사건 발생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은 몸에 든 멍은 옷을 벗겨보지 않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마와 턱에 든 멍까지 못 봤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시설 측의 책임 떠넘기기에 울분을 토했다. 가족들은 진상조사와 함께 시설장의 사과, 치료비 등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피해자 가족의 제보를 받고 진상조사를 실시한 시설공대위 임형국 변호사도 "치매 증상 때문에 고통을 표현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외부 병원 진단까지 받을 수 있었겠냐"며 "29일 밤 시설 내 누군가에 의해 폭행 당했는데도 책임 추궁을 두려워하는 시설 측이 이를 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관할 서부경찰서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김정하 활동가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3주가 지났는데도 고소인 조사는커녕 피해자 면담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개시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폐쇄 시설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설공대위는 "영남원처럼 생활자가 80여 명에 이르는 데도 상주 관리자는 2명에 불과하고 외부 감시도 받지 않는 시설은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항상 있다"며 소규모·개방 시설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사 처음으로>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흐름과 쟁점

1. 서울시와 경찰청의 양상불... 집회시위는 가라?

개약집시법대우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광장 사용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시에 시청앞 광장 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4/6). 인권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광장이용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했다(4/20). 한편, 경찰청은 집시법 시행령은 입법예고하고(4/1), '소음규제' 관련 토론회를 열어 소음규제기준은 '80데시벨'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석회의는 "사실상의 모든 집회 금지"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4/19).

2. 이라크 점령군, 너도나도 철수 밝혀

미군이 이라크 팔투자 지역을 봉쇄하면서 이라크 전역에서 점령군과 시아파 민병대 사이에 대규모 전투 발생, 이라크인 사망자 속출했다(4/5). 미군 헬기가 팔투자 사원을 공격해 이라크인 4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민간인 사망이 줄을 이었고, 이중의 다수는 어린이와 여성이라고 보도됐다. 이라크 무장저항세력의 외국인 납치가 계속되자 일본, 불가리아, 노르웨이 등에서 군대철수 여론이 다시 일어났다(4/7). 한국도 목사 8명이 한 때 이라크 저항세력에 납치되어, 추가파병 반대 여론에 불을 지폈다(4/8). 스페인군은 관할지인 이라크 중부 나자프 등에서 조기 철수했고(4/18),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노르웨이 등도 주둔군들의 철수와 철수 계획을 발표했다(4/19~21). 이라크 평화네트워크는 팔투자 현지의 증언을 모아 미군 학살만행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했다(4/22). 스페인은 이라크에서 군대를 완전히 철수시켰다(4/27).

3. "단 하루의 시해가 아닌 평등한 인간으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아래 420기획단)은 3월부터 시작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노숙 농성을 계속 이어가며 곳곳에서 투쟁을 벌였다. 서울역 부근 육교 아래 도로를 점거하고 '장애 차별 철폐'를 외치던 장애인과 비장애인 35명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4/13). 420기획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연금법 제정, 노동권·이동권·교육권 확보, 자립생활 지원 등 장애인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4/19), 마로니에공원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4/20).

4.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수면위로

송두율 교수 사건 관련해 국가보안법 헌법소원이 청구됐다(4/8).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그림 '모내기'의 작가 신학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통보해왔다(4/19). 통일연대 민경우 씨에게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4/27).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84.7%가 국가보안법 개폐에 찬성한다는 보도되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가보안법 개정의사를 밝히는 등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다(4/28).

5. 이것이 민주주의!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쟁취를위한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대의제의 한계와 직접

민주주의의 방향에 대한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4/7), 국민소환제·발의제 도입을 위한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4/10). 투표일에 투표용지와 함께 '국민발의제 도입', '과병 철폐' 등을 요구하는 용지 넣기 운동을 벌인 네트워크는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을 정부에 전달했다(4/14).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5월 04일 (화)
제 256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지문을 이용한 표적 수사
2. 또다시 '파병반대' 촛불을 켜며...
3. ①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② 이제 그들에게도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자
4.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지문을 이용한 표적 수사

경찰, 포스터에 찍힌 지문과 학생운동 경력 연동시켜 혐의자 추적

경찰이 지문정보를 경력 등 개인정보와 연관시켜 표적수사를 진행한 것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배재대학교 졸업생 구재군(27) 씨는 4월 19일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출석을 요구하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 류근실 경사는 전화를 통해 구 씨가 학내에 한나라당을 비방하는 선거법위반 포스터를 붙였고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증거는 다른 아님 포스터에서 채취한 '지문'이다. 구 씨는 "류 경사가 '전체 34개의 채취 지문 중에 당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확실한다'며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출석하지 않으면 불합리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협박에 가까운 수준으로 구 씨를 몰아 부쳤다. 경찰의 이러한 막무가내식 출석요구에는 구 씨가 인문대 학생회장을 했던 경력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 길용수 사무차장은 "수많은 지문 중 유독 작년 인문대 학생회장을 지낸 구 씨의 이력을 조사해서 표적 수사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지문 중에 구 씨의 출석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류 경사는 "수사상의 비밀"이라고 답했으며, 포스터에서 몇 명의 지문이 채취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대답 못하겠다"고 말했다. 구 씨는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 7시간 동안 조사 받은 후 귀가했다. 경찰은 26일에는 다른 지문 채취자 은용석 씨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해 30일 조사를 진행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연식 활동가는 "경찰이 지금까지 지문정보를 신원확인에만 이용하고 다른 정보와 연결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며 "학생운동 경험이 있는 2명만 출석요구한 것은 지문 정보를 가지고 출신 학교, 경력 등 특정한 개인정보와 연결시킨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국민의 지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인 자동지문신원확인시스템(AFIS)을 이용, 지문정보를 예비범죄자의 정보로 취급하여 검색에 이용했다. 윤 씨는 이어 "이처럼 추론된 정보를 통해서 표적 수사가 진행된다"며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에게 언제나 유사한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우려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법률의 근거조차도 없는 일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적법절차의 원칙·과잉침해 금지의 원칙 등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인신자유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정보의 남용이 드러난 만큼 이런 식의 표적수사에 대해 문제제기 할 계획이다.

<기사 처음으로>

또다시 '파병반대' 촛불을 켜며...

국민행동, 시국선언·입법청원·촛불집회 계획 밝혀

미·영 동맹군의 이라크 포로 성 고문·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다시 맞을 올렸다.

3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3일 한 국언론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제·노동·여성·종교 등 사회 각계인사 1만571명의 이름으로 17대 국회에 이라크 파병 철폐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국민행동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라크인 수감자들에게 일어난 모욕과 학대는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의 인권이나 민주적 권리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핑계로 파병철폐의 결단을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의장은 "파병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다던 정당들도 총선이 끝나자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며 "17대 국회 당선자는 국민의 우려와 반대사를 존중해 빠른 시간 안에 파병 재검토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파병철폐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민행동은 대통령 (또는 직무대행), 여야 정당 대표, 각 당별 17대 국회 당선자와의 연쇄 면담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장만길 상지대 총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당선자,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등 각계 인사 50명을 국민청원 대표단으로 위촉하고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국민적 청원서명운동을 추진하여 17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광화문과 전국 각지에서 '파병 철폐 촛불 한마당' 등 촛불 행사 계획을 밝혔다. 국민행동은 특히 6월 12일을 '이라크 파병철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범국민 행동의 날'(가칭)로 지정해 전국적인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사 처음으로>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이제 그들에게도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자

17대 국회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이야기한다. 막연한 바램이 아닌 '투쟁'으로 얻어내는 '민중'과 '정의'의 승리이기를 바라는 이 많은 희망들 가운데에는 사상과 양심을 짓밟는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폭력인 호주제 폐지의 염원이 담겨있으며,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같은 '민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서는 수많은 제도들의 '쟁취' 역시 담겨있다. 또한 이 '희망'들 가운데에는 범죄자란 이유로 사회적 격리를 정당화해온 사회보호법의 폐지 역시 한 권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로 24년 동안 지속돼 오면서도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하기만 한 이 법은 이미 형벌이 종료된 사람들을 '장래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최대 7년 동안 다시금 '징역살이'를 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전두환 정권에 의해 입법이 이뤄진 이래 지난 24년간 수 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의 희생자가 되었고, 현재 제도 청송감호소에는 그 희생자들이 철창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권단체와 피감호자들은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사회보호법이 '범죄자'들에 대해 '있을 지도 모를 위험성'만을 근거로 해 '징역살이'를 시킨다는 것이 그 이유이고, 이 법의 목표가 된 사람들의 대다수가 우리 사회의 빈곤계층(피감호자 중 70%이상은 생계형 범죄자며, 또한 피감호자의 절반이상은 초등학교 교육도 채 이수하지 못할 만큼 가난했다)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이다. 게다가 교도소보다 열악한 감호소 내의 비인간적인 처우와 환경들은 이들을 더욱 더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그들의 가족의 기반을 와해해 사회적 지지망을 상실케 한다는 것이 사회보호법 폐지의 이유이다.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으로 시작된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지난 한해 들불처럼 번졌다. 한나라당을 비롯해 3개의 정당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으며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간단체는 물론 사회원로들이 앞 다투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사회보호법은 두터운 '인식'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이 법의 반인권성을 부인하지 못했지만 '사회 방위를 위해 그들의 인권침해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전히 나의 우편함에 하루가 멀다하고 피감호자들의 편지가 배달된다. 살아남기 위해 흘리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와, 기약도 없는 징역살이에 부인과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 어린이날·어버이날 자식에게 부모에게 갈 수 없는 서러운 눈물들이 가득 담긴 편지 앞에서 과연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사회'는 무엇인지, '인권의 보편성'은 무엇인지 다시금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유해정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헌법재판소, 이라크파병 헌법소원 각하 결정

미군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세 번째 규모에 달하는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한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각하결정을 내려 비판이 일고 있다.

시민 이 모씨는 이라크 파병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5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 29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대통령의 파병 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기에 헌재의 사법적 심판은 자제되어야 한다"며 이라크 파병 위헌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가 각하 결정이유로 제시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지나치게 애매한 개념'이라며 "책임 회피"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헌재의 입장이 근거하고 있는 '통치행위 사법처리 불가론'에 따르면, 사법기관이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범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범위에 따라 큰 폭으로 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파병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와 이라크전쟁이 침략전쟁인지의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재판소의 판단이 대통령과 국회의 그것보다 더 옳거나 정확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움'을 헌재가 자인한 꼴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헌재는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정희 변호사는 "사법소극주의"라고 일축했다. 이 씨는 "통치행위론에 의하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줄어들다"며 "헌재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헌법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통치행위론을 구시대적인 이론이라며 그다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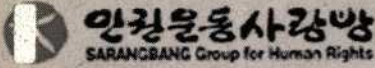
이에 헌재는 "사법적 심사의 회피로 자의적 결정이 방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실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70%의 국민이 국회를 심판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전투병 파병에 반대하는 60%에 이르는 국민의 의사는 어디에서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민 스스로 입법할 수 있는 국민발의제와 국민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 대표자를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17대 국회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한 열린우리당은 "이라크 파병과 같은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등 다른 방법으로 그 정당성을 묻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제 파병의 정당성은 그야말로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과 열린우리당의 행보를 통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누군가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 실시와 같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희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5월 05일 (수)
제 256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교섭 촉구
2. <현장스케치>'우리의 작은 연대를 기억해주세요'
3. 다양한 인권 현장을 찾아가는 국내 영화들
4. 소리로 보고, 그림으로 듣는 인권영화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해결부터 사회보장 확대에 이르기까지 공적영역 전반에 관해 정부에게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아래 공공연대)는 4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확충을 통한 교육·의료·공공서비스의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위해 정부에게 교섭을 촉구하며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공연대 임성규 집행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가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법을 초월해서 강제로 개입하여, 노동자를 탄압하고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았으며, 사회보장 예산을 축소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고 교섭 요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연대는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를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사용자'라며,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공동교섭단'의 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이날 발표한 대정부 6대 요구안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민간위탁, 파견, 용역 등에서 간접고용을 중단하고 조달청 물품조달용역계약제를 폐지하여 공공부문에서 먼저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 2003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동자 402만 명 중 37.6%인 151만 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부문도 불안정 고용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획예산처가 필요인력에 대한 예산을 긴축한 탓에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필요예산 확보를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대는 사회적 의제까지 눈을 돌려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공적영역의 예산확충 요구도 6대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현재 10.1%인 사회복지 예산과 5.2%인 보건의료 예산을 각각 전체 예산 대비 20%와 10%로 늘리고, 4.7%인 교육 예산을 GDP 대비 7%까지 확보하자는 것이다. 또한 '인건비 예산의 경우 노사간 단체교섭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제출하고 있다'며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요구했다. 이밖에 6대 요구안에는 △공공부문 인력 확충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공공부문 시장화·개방화 중단 등이 담겨 있다.

공공연대는 대정부 직접교섭을 위해 2003년 5월 결성되었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6개 노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40만의 노동자를 포괄하고 있다.

이날 공공연대는 6일에서 11일 사이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무조정실 서기관에게 전달했다. 앞으로 공공연대는 비정규특위를 구성하고 정책토론회와 예산 수립에 대한 개입, 공동행동 등 적극적인 실천에 나설 계획이다.

<기사 처음으로>

<현장스케치>'우리의 작은 연대를 기억해주세요'

인권단체들, 팔레스타인 평화 염원 모아 화요캠페인 시작

팔레스타인 민중을 향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4일 새벽 가자지구의 한 난민촌을 향한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은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 현재진

행형임을 상기시킨다.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외침 앞에 국내 인권단체들이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염원하고 이스라엘의 학살 중단을 촉구하는' 작은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제 우리 사회도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습관적 침묵'을 깨야한다"며 인권단체들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매주 화요일 '화요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것. 4일 출발한 화요캠페인은 아직은 작은 규모이지만 팔레스타인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이 캠페인을 지속하겠다는 참가자들의 의지만은 결연하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팔레스타인을 기억하고 있는 작은 목소리가 있음을 알려나가고 싶다"며 "비록 지금은 작은 힘이 모였지만 연대를 통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날 캠페인에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실태가 고발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미니 씨는 "2000년 10월부터 3000여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되었는데 그 중 13~15%가 15세 이하의 어린이"이고, "이스라엘 군은 눈을 겨냥하는 사격을 연습하며 실전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집회 장소 주변에는 경찰들이 위협적으로 자리한 채 영상촬영으로 집회참가자를 감시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우리에게나 평화란 가야할 길이지만 멀고 먼 길처럼 느껴진다. 집회참가자의 머리 위로 부서지는 봄 햇살은 역설적으로 너무나 눈부시고 평화로웠다.

<기사 처음으로>

다양한 인권 현장을 찾아간 국내 영화들

제8회 인권영화제 국내작 15편 선보여

제8회 인권영화제에서는 주류 영화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어두운 변방의 목소리를 다채로운 방식으로 표현한 총15편의 국내 인권 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

인권영화제의 국내 상영작 중에는 연륜이 쌓인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신작들이 눈길을 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입체적으로 조명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본지 2004년 1월 10일자 참조)를 비롯한, <학교>, <노들 바람>등이 바로 그것.

덕성여대 민주화 투쟁을 기록한 <학교>는 지난 90년에 시작된 덕성여자대학교 민주화 투쟁의 다사다난했던 역사를 세밀하게 기록하며, '학교'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슬며시 물음을 던진다. 작품은 지난한 시간의 연대기 속에 채워진 복합적인 관계의 실체에 접근하면서, 여전히 '학교' 공동체의 건강한 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노고에 주목한다. 몇 년 동안 장애인권에 기록치 않은 관심을 표명하며 작품 활동을 펼쳐 온 박종필 감독의 신작 <노들 바람>도 이번 영화제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씨앗을 뿌려온 노들 장애인 야간 학교 내부의 이른바 '검정고시와 운동의 갈등'을 다룬 이 작품은, 명료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불가피한 현실의 무게를 전한다.

정치적 소수자에 자리한 여성의 삶, 조금씩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영화들도 이번 영화제에서 소개된다. '여성'을 주제로 꾸준히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온 김진일 감독은 <잊혀진 여전사>에서 반공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의 고달픈 지배를 받아 한국의 현대사에서 쉽게 잊혀졌던 '여성' 빨치산의 존재를 복원시키고자 한다. <엄마...>는 어린 딸의 엄마이자 한 여성 노인의 딸이기도 한 감독이 본인과 가족의 삶의 역사를 진솔하게 드러내며, 여성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고찰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늙은 언덕>은 한 터키 시골의 별다르지 않은 나날들을 관찰하면서, 생계 부양자이면서도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내재화 된 터키의 부당한 현실을 감내해야 하는 터키 여성들의 갑갑한 오늘을 지긋이 부각시킨다.

다양한 실험적 기법들을 선보이거나, 장르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살려 오늘날의 이면을 반추하는 영화들도 있다. 윤성호 감독의 <산만한 제국>은 다국적 기업, 저절화 된 상업 방송, 투기 자본, 네이스, 민영화, 노동 탄압 등이 존재하는 그야말로 '산(山)만한 제국'이 펼쳐 있는 오늘날에 대하여 프리즘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을 시작할 수는 있다"고 말한다. 정리 해고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어떤 노동자 가족의 생활을 잔잔히 비추는 드라마 <빗방울 전주곡>은 등장 인물들의 일상에 침투해 있는 고단함이 실은 어디에서 기인했는가를 극적으로 드러내며 묻혀진 노동 탄압의 진실과 마주한다.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황폐화된 디스토피아의 세계에서 노동하며 살아가는 어린 영혼의 맑은 꿈을 인상적으로 표현한 애니메이션 <하늘나무>, 이라크 전쟁을 주도하고 동참한 무리들을 풍자하는 뮤직 비디오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나>등도 상영된다.

<기사 처음으로>

소리로 보고, 그림으로 듣는 인권영화

'장애인 관람 접근권' 준비하는 제8회 인권영화제

지난해 영화제 기간 동안 한 저시력 장애인이 자막 크기를 장애인도 볼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인권영화제라면서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해 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항의의 요지였다. 영화제의 열악함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그에게는 '궁색한 변명'일 뿐. 그의 요청은 '인권'영화제라면 귀담아 들어야 할 고인이었다. 영화제 초기,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정부와 직접 부딪히며 싸워야 했던 인권영화제는 이제 또 다른 영역을 확보하라는 인권적 요청 앞에 서게 된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영화를 '보는' 것이 가능한가?" "사운드도 없이 제대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가?" 인권영화제는 비장애인들의 편에 박힌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주위의 장애인들과 장애인영화제에 자문을 구하면서 그들도 영화를 감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소리를 보고 그림을 듣고' 시·청각장애인들이 영화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말이 없는 장면에서 해설해 주는 소리가 필요하고, 청각장애인들에게 그림을 설명하는 자막이 필요한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더빙과 장면해설을 곁들인 영화는 모두 4편이며 15편의 한국영화 중 8편이 우리말 자막이 곁들여져 상영된다. 더빙된 작품은 개막작 <아나의 아이들>과 장애아동들의 이야기 <나의 혈육>. 더빙된 성우의 목소리와 장면해설은 FM수신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전달된다. 점자해설책자를 발간하고 개·폐막식에 수화 통역을 준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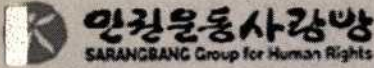
지체장애인들의 극장 접근도 고려 대상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서울아트시네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겐 곤혹스러운 장소임을 먼저 밝힌다. 가장 가까운 안국역에 아직 리프트와 엘리베이터가 없다. 또한 대부분의 극장은 휠체어가 들어갈 만한 좌석이 없어 계단 참에서 보는 실정이다. 인권영화제가 개최되는 두 극장 모두 마찬가지이다. 인권영화제가 장애인들과 함께 당국에 요청해야 할 부분인 것.

장애인 관람 접근권을 위한 올해의 준비는 참으로 빈약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가난한 재정, 부족한 일손' 그것이 이유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비장애인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 '눈'과 '귀'에 얽매이지 않는 인권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화활동 | 인권영화제 | 김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5월 07일 (금)
제 256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불법파견 금지"
2. 클릭! 인권정보자료 :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는가」
3.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불법파견 금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목숨 건 고공시위 벌여

0.3평의 좁은 공간, 100여 미터의 높이, 여전히 새벽이면 찬바람이 관통하는 타워크레인에서 노동자들이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아래 타워노조) 소속 노동자 500여 명이 서울·경인 지역 100여 대의 타워크레인에서 지난 5일 새벽을 기해 고공농성에 돌입, 현재까지 경찰과 대치중이다.

타워노조는 '불법 파견 금지, 근로계약서 체결, 연·월차 수당, 퇴직금 지급, 임금 14.4% 인상'을 요구하며 4월 28일부터 합법적인 총파업을 벌여 왔다. 무엇보다 이들이 중요하게 내걸고 있는 요구는 불법적인 파견을 금지하기 위한 '위탁근로계약서의 해지'이다. 위탁근로계약서는 주로 원청회사와 하청회사인 크레인장비임대업체 사이에 맺는 계약서다. 크레인장비임대업체는 크레인장비를 임대해주는 업체이지만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자 고용을 '떠맡게' 됐다. 그러면서 저급과 같은 '위탁근로' 형태의 고용관계가 형성됐다.

타워노조 박종국 교육선전국장은 "이것이 바로 불법파견의 형태"라며 "레미콘이나 학습지 노동자처럼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 계약은 주로 구두로 하고 있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4대 보험, 퇴직금, 수당 등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은 레미콘이나 학습지 노동자들처럼 개별 노동자가 '소사장'이 되기도 한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은 기사에게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한 뒤 소사장인 된 기사가 다른 기사를 고용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무관리 책임은 고스란히 타워기사들에게 넘어간다. 노조 조사에 의하면, 부산에는 50%이상, 전국적으로는 30%이상 소사장에 고용돼 있는데, 소사장에 지급한 임금의 15-65%, 최고 180만원을 중간에서 임대업체가 착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고용관계는 명백한 불법이자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일요일도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12시간 이상을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100미터 상공에서 일해왔다. 하지만 정작 이들의 월급은 120만원 정도고 이것도 일을 할 때 뿐. 공사가 끝나면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구직'에 나서야하는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타워노조 노동자들이 타워크레인에 올라 생명을 담보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클릭! 인권정보자료 :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는가」

어린이에게는 오늘 행복할 권리가 있다

지은이: 야누쉬 코르차크/ 옮긴이: 송순재·안미현 등/ 펴낸곳: 내일을여는책/ 416쪽/ 2002년 3월

어린이날을 맞아 학대받는 어린이, 빈곤의 뒷에 갇힌 어린이, 장애아와 이주노동자 자녀 등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더 짙은 그늘에 있는 어린이들을 먼저 살피고 배

러하는 하는 일은 당연하지만, 이런 이슈화가 나머지 어린이들은 행복하다는 근거 없는 가정을 강화할까 걱정이이다. 이런 의미에서 '어린이의 벗' 야누쉬 코르작의 저작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1878년 유태계 폴란드인 가정에서 태어난 코르작은 1911년 '둘 시에로트' 고아원의 책임을 맡은이래 평생을 어린이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헌신했던 인물이다. 그를 아는 이들은 자신이 돌보던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나치죽음의 수용소로 향하는 트레블링카행 기차에 기꺼이 몸을 실었던 그의 마지막을 충격적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감동은 '미래에 구속된 어린이'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어린이' 하나하나의 모습을 따뜻하고 세밀한 눈으로 관찰하면서 얻어낸 그의 어린이 인권론으로부터 나온다.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는가』(1918)에는 어린이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코르작 평생의 통찰이 담겨 있다. 코르작이 주장하는 어린이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본권은 죽음에 대한 권리, 오늘 하루에 대한 권리, 원래 자기 모습대로 있을 수 있는 권리이다. 모두가 어린이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고 요구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리들이다. 그는 기숙사와 여름 거주지, 고아원의 일상을 탐구하면서 어린이가 공동체의 진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한다. 서로를 돌보고 자치 회의와 법정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어 시민으로 성숙해나가는 과정은 '어린이의 공화국'이 가까운 곳에서 건설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옮긴이들이 쓴 코르작의 일생과 교육론에 대한 해설도 그의 어린이 인권론을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 구실을 한다.

그의 다른 저작 중 『아이들이 심판하는 나라 1, 2』, 『아이들을 변호하라』, 『야누쉬 코르작의 아이들』도 국내에 번역 출간돼 있어 함께 읽어보면 좋다.

<기사 처음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매우 엄격히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2002년 검찰 기소당시 구속된 피고인의 비율이 40%(전체 208,506명 중 86,266명)가 넘는다는 통계(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회의 2004.1)는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무색케 한다. 더욱이 이들 8만 여명은 기소당시의 구속 인원일 뿐, 2002년 수사단계 구속자는 9만9천명이 넘는다. 물론 구속자의 절대수와 그 비율은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불구속 재판 원칙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는 외국과 비교하면 더 확연히 드러난다.

입건범죄수 : 구속인원 : 범죄1천건당 구속자수
 한국 : 934,933 / 118,576 / 126.8
 일본 : 2,086,735 / 101,790 / 48.8
 독일 : 6,586,165 / 19,900 / 3.0
 <97년 구속관련 자료- 사법개혁위원회 보고 2004년 1월> (단위 명)

인신구속은 권리의 제한과 박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도주·증거 인멸 등의 위험이 아니면 변론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권리보장 측면에서 '불구속의 원칙'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구속'이 '범죄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 인식·운용되면서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이 '예외'가 돼버렸다.

뒤틀림된 영장실질심사 제자리에 놓기

인신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95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97년 도입됐던 영장실질심사제도는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의 일대진전을 이룬 조치로 평가된다. 체포 이후 최초로 판사를 대면한 피의자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진술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는 구속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혁신적 조치로 기대됐다. 대한변협 『1997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가 시행된 97년 한해 동안 구속자수는 11만8천583명으로 96년 14만3천68명보다 17.1%가 줄어들었고, 구속영장 기각률도 96년도의 7.4%보다 높아진 17.7%에 이른다. 영장실질심사제도가 구속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97년 검찰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으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피의자의 요구 여부에 따라 심문이 진행되는 '임의적 심문'으로 축소됐다.

인권사회단체의 비난 속에 개정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인권보장의 후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지난 99년 한국정부에 대해 모든 피의자에게 '신속한 판사 대면권'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대한변협도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개정에 관한 청원>에서 "영장실질심사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영장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로 신청에 의하여 좌우되어서도 안되고 그 심문의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겨서도 안 된다"며, "국제인권규약상 영장실질심사제는 48시간 이내에 법관에 의한 필요적 심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또 피의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수사기관의 자료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되는 것으로, 영장실질심사제도를 필요적 심문제도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보석 확대

한편 법무부 검찰개혁자문위원회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논의에서 보석확대를 통한 인신구속제도의 개혁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의 필요적 보석의 제한사유에서 '상습범·주거부정' 등을 삭제하고 보석 허가시 보증금 이외에 '신뢰할 수 있는 자의 출석보증' 등의 조건을 두어 보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석확대는 구속적부심사와 함께 이뤄지는 것으로 '영장단계의 보석 허용'은 아니다. 한양대 이은모 교수는 『형사법 연구』 제19호(2003 여름)에서 최초 구속이 결정되는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의 보석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교수는 "비교법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개의 선진국가인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라며 "가능한 한 신제구속의 초기 단계에서 보석이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의자 심문절차에서의 보석을 통해 구속을 줄여갈 수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기소전 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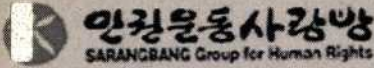
구속제도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하는데 있어 구금기간 단축도 빠질 수 없다. 일반 사건의 경우 30일(경찰 10일, 검찰 20일),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50일(경찰 20일, 검찰 30일) 동안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에 대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과도한 기소전 구속"이라며 "구금의 정당한 근거 부족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9조의 이행에 의문을 갖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유엔의 해당법률 개정 권고는 이미 5년 전의 일이지만, 법개정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소전 구금일수에 대한 논의는 특히 경찰과 검찰의 힘 겨루기가 아닌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을 위한 '구속'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 형사절차에서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필요적 영장실질심사 △기소전 보석확대 △기소전 구금일수 축소 등을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5월 08일 (토)
제 256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아동에 대한 보호, 언제까지 충격적 사건을 기다릴 것인가
2. 미군, 가는 곳마다 '전쟁 범죄'
3.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논평> 아동에 대한 보호, 언제까지 충격적 사건을 기다릴 것인가

최근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상태에서 오랜 시간 방치됐다가 발견된 어린 삼남매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다. 보살핌이 절실한 어린 아동에 대한 방임이 아동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했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어린이날에 즈음해서 전해진 소식에, 더더욱 '비정한 부모'를 강조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고 세간의 이목도 집중됐다.

그러나 아동의 방임과 학대받는 아동의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동학대에 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신고된 아동학대 2천 9백 여건 중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교육·의료 등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965건, 신체 학대도 347건이고 정서적 학대, 유기 등도 여러 건이다. 또한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통계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려준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물론 아동을 소유물로 보고 이러한 문제를 '가정사'로 인식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과 부모의 태도 변화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신고에 있어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신고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동방임이 인식과 태도의 문제만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더해 빈곤층의 증가와 함께 '빈곤 아동'이 증가했다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는 '밝고 건강해야 할' 아동의 미래에 매우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의 지원과 양육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로 남겨지는 한 아동방임 역시 '가정의 문제'로 남겨지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게 '개입 또는 처벌에 그치지보다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폭력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회복, 재통합을 위한 지원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아동의 건강과 보호, 성장을 위한 기본적 조치는 '남아도는 경제력'으로 베풀어야 하는 선심이 아니라 애초 마련돼 있어야 하는 기본권이다. 극단적이고 놀랄만한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동의 온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는 지원과 법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미군, 가는 곳마다 '전쟁 범죄'

국내 인권단체, 미군의 비인간적 잔혹행위 규탄·파병 철회 촉구

전기고문 위협, 알몸상태에서 구타, 성고문... 이라크인에게 자행된 미군의 비인간적 잔혹행위가 공개되면서 미국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27개 인권단체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인권단체는 7일 미대사관 앞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짓밟아버린 가혹한 고문과 성학대의 실상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54년 전 미군이 이 땅에서 편 옷을 입은 모든 사람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기억한다"며 "미군의 만행과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군의 잔혹행위에 대한 비난은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중요스럽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아랍국가들 뿐만 아니라 덴마크, 스페인 등의 유럽국가, 이라크전 당시 미국을 지지했던 호주에서조차 전쟁 반대와 철군 여론이 일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도 4월 30일 "지난 한 해 동안 연합군에 의해 자행된 고문과 학대에 대한 보고를 꾸준히 받았다"며 "이라크인에 대한 고문과 학대를 중립적·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데 열중하며 "이와 같은 방식이 미국에서 행해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범죄는 미국 정부와 무관하다"는 주장까지 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미군이 펴낸 보고서에는 미군 정보기관들이 '포로들의 심문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체적·정신적 조건을 만들라'고 요구하면서, 이라크인 포로들에 대한 고문과 인권유린을 방임했다"고 반박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전쟁범죄와 고문을 정당화하며, 전쟁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해왔다. 2002년 미국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대해 미군에게만은 면책특권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기가 비준을 거부했고, 각국의 고문상황을 감시하고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제정에도 반대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설 국제법원으로, '반인도적 범죄' 규정은 △살인 △노예화 △고문 △성범죄 등이 포함된다.

인권단체들은 막다른 골목까지 온 이라크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가 침공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라크 점령군을 철수하고, 이라크 민중 스스로의 통치로 만들어 가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 정부와 각 정당에게도 "인권의 이름으로 파병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연이어 밝혀지는 미군의 이라크인 고문·학대에 전세계는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라크내 미군의 철수와 전쟁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형사사법은 체포, 수사, 재판, 구금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들을 의미한다. 신체를 구속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명료하게 규정된 위 과정들은 일면 인권보호 장치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인간'을 대입하면 차별이라는 '커다란 구멍'을 드러낸다. 제2회 전국인권활동가준비모임은 '형사사법절차와 차별'이란 주제로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적인 법과 관행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했다.

보조인 제도 확대 반드시 필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박숙경 씨는 수사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시 보조인 제도의 확대"를 주장했다. 대개 장애인들이 자신을 적절하게 변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법률지식이 있는 공정한 수화통역자가 지원되기는 만무하고, 수사 및 재판상황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는 조건에서 시각장애인은 '공포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적절하게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이들은 누명을 쓰기도 한다.

형사절차에서 강조하는 '무기대등의 원칙'은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관계 개선부터 시작해야 한다. 박 씨는 "정신지체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해 진술과정에서 자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진술보조가 필요하며,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수사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통역서비스가, 시각장애인의 경우 대필·대독·점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보조인의 자격범위를 친족에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범위 내에 보조인이 될 만한 가족이 없는 장애인 피의자는 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 씨는 보조인의 범위를 "가족의 범위를 넘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교사, 사회복지사, 친분관계에 있는 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라진 적법절차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주로 강제퇴거 과정에서 과도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 강제퇴거 절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을 시작으로 단속대상자에 대해 강제퇴거 명령을 발령하고 그 명령을 집행하여 대상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이다. 그 첫 과정에서 원시적인 수준으로 이뤄지는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강제연행은 '인간사냥'을 연상케 한다. 가스총, 수갑 등이 사용되는 것은 물론 구타, 인간적 모멸 등 강제퇴거대상인 이주노동자에게 '적법절차'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정정훈 변호사는 강제단속 과정에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행정상의 즉시강제에 있어서는 보호명령서 혹은 강제퇴거명령서를 근거로 집행할 수 있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강제단속 및 연행의 경우도 행정상의 즉시강제로 보고 영장 없는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의 기본권 보장취지에 비추어 행정상의 즉시강

제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여부를 형사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표적단속은 물론이고 불법체류자 강제단속의 경우에도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강제단속 및 연행절차가 강제되거나 처분이라는 행정목적 외의 행정벌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의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적인 단속 및 연행은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한도에서만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성소수자인권, 형사법절차에 고려돼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가 명시되어 있지만 성소수자에게 이 사회의 시스템 자체는 '진입금지' 팻말과 같다. 형사사법절차 역시 다를 바 없다.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성적체성이 아웃팅 될 가능성 때문에 성소수자는 피해사실을 법에 호소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케이 활동가는 "법무부의 정책목표와 과제 중에 사회적 약자의 권리 향상 모색에서 성소수자는 고려대상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워낙 드러내기 어려운 성격의 문제라 사례수집조차 체계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웃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성소수자들이 형사사법 제도를 이용하기란 요원하다며 케이 활동가는 "형사사법절차 상의 성소수자의 인권문제가 법무부의 검토대상이 되고 법령제정과 절차개선에 반영되어, 그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자기방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형사사법 절차는 그 자체로 벽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벽을 허무는 일은 인권지도를 세밀하게 그리는 일로부터 시작한다. 세밀화 작업이 다양한 조건에 놓여있는 소수자의 참여로 풍성해질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5월 11일 (화)
제 256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광고' 정치에 짓밟히는 '인권'
2. 정통부, 수사권한에 눈독
3.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
4.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5. <특별기고> 단죄 받아야 할 자 누구인가?
6. Bring the soldiers back home! - 군인을 집으로!

'광고' 정치에 짓밟히는 '인권'

장애·인권 단체, '장애 차별 시선' 인권위에 진정

장애인을 '둘러리'로 세운 채 인격을 무시한 정치인과 언론사, 복지시설에게 따끔한 일침이 가해졌다. 지난 2일 열린 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일산홀트복지타운을 찾아 중증장애인을 목욕시키는 장면이 언론에 그대로 방영돼 장애인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37개 장애·인권단체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문화방송, 연합뉴스, 일산홀트복지타운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인권교육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정 의장이 벌거벗은 중증장애인을 양다리를 치켜들고 목욕시키는 장면이 장애인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각종 TV와 신문에 적나라하게 방영되어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이번 사건은 장애인을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는 사회의 만연된 시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장애인의 권리가 장애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익에 따라 얼마나 쉽게 침해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노동장애인야학 박경석 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 의장의 행동 자체가 장애인을 시혜와 동경의 대상으로 보고 자기결정권과 주체성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차별적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확보 등의 인식함을 면피하기 위한 이중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정치인이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장애인을 이용하는 것 못지 않게 언론 또한 선정적인 불거리 중심의 보도태도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동정심을 야기 시키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수지 활동가는 "언론이 취재원의 인권은 안중에 없고 장면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관심을 끌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산홀트복지타운의 인권의식 결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장애인단체는 "일산홀트복지타운이 왜곡된 자원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도움을 받는 사람의 이미지로 고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 장애인이 이용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MBC와 YTN의 사과방송과 장애인을 포함한 소수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보도규정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방송위원회에도 제소했다.

<기사 처음으로>

정통부, 수사권한에 눈독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인권사회단체 반대

정보통신부가 사이버 범죄 대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사법경찰권법'의 개정 시도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7일 △개인정보 침해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을 정보통신부가 단속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직무행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에관한법률(아래 사법경찰관법) 개정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사 이버 테러에 대한 예방과 대응력 강화 등을 법률개정의 이유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사회단체는 "수사 업무는 인권침해 소지가 가장 큰 업무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이유로 사법경찰관법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사법경찰관법 개정 시도를 전면적으로 반대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에 대해 "국가 기관의 수사권이 무분 별하게 확대되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며 "이번의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하여 부여된다는 사법경찰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법 경찰관은 국민의 권리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원과 법률에 의해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불필요한 확대 역시 경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장씨는 "개정 항목 중 '불건전 정보 유포'항 등은 정통부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적용 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경찰에 관련 부서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정통부에게 이러한 권한을 줄 필요성은 어디에도 없다"고 법률개정의 의 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통부는 오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사법경찰관직무법률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이 러한 정통부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적인 의견 발표를 요 청했다. 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 설비에 대한 현행 사법경찰관법을 포함 하여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관 증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귀 기울여야 할 목 소리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었다.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이려해도 발이 떨 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비명과 다급한 움직임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떡 해. 어떡해"를 연발하며 발을 동동구르는 일뿐이었다.

지난 7월 오후 서울 광화문 열린 시민마당에서 한 노동자가 "노동탄압 중단"을 외치며 스스로 몸을 불살랐다. 동료들이 서둘러 불길을 잡았지만, 순식간에 몸을 감싼 불길은 따뜻한 미소의 택시노동자 조경식(43)씨를 붙여 겹겹이 그을린 참혹한 모습으로 바뀌놓 았다.

숨을 헐떡이면서 신음하는 그의 옆에서 동료들은 호느꼈다. 현재 조 씨는 전신 49% 3 도 화상을 입고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다.

조 씨는 경력 7년차의 중견 택시기사다. 반쯤 탄 조 씨의 가방에서 나온 월급명세서 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쳐 110여 만원이 급여총액으로 적혀있었다. 하루 12시 간, 주7일 근무의 대가이다. 지난해 교통개발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법인택시 운전자 의 월소득은 113만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인 4인 가족 102만원보다는 많지만, 준 극빈층 수준인 122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지난 1995년부터 택시회사의 부가세 50%를 감 면 해주고 있지만, 이 경감분이 '언제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기 어렵다. 이 금액이 5천 억 원에 이른다. 사업주의 불법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맞서는 노동자들에게, 대부분의 회사는 '해고'로 답한다. 중앙노동위에서 계류 중인 구제신청의 30%가 택시노동자 관 련 사안이다. 게다가 한번 해고를 당하면 다시는 택시회사에 발을 붙일 수 없다. 사업 주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도는 '블랙 리스트' 탓이다.

조 씨가 몸담았던 사업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업체'였다. 조 씨는 분신하기 며칠 전, 동료에게 "나 하나 없어도 좀 달라질까"하며 말을 흐렸다고 한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후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몸을 불태우며 절 규한다. 노동법은 많은 현장에서 무시되고, 노동자들은 죽음을 배수진으로 치고 싸운 다. 정치인들이 '민생체험'에 나설 때마다 '들러리'로 '활용'하는 택시노동자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막상 서민들의 '입노릇'을 하는 택시기사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는 많지 않다. 지난 1984년 이후 30여 명이 넘는 택시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불법경영과 정부의 무관심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택시기사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은 잠시 접어두자. 이제는 이들에게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돌려줄 때다.

◎최혜정 님은 한겨레21 기자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1. 미-영국군 반인륜 범죄, 세계가 경악

미-영국군의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고문 등 반인륜적 범죄가 폭로되며 국제사회 비난 쏟아져(5.3)/ 미군의 전쟁 범죄에 국제적인 비난 확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자체조사 착수/ 부시 미 대통령, '포로 반인륜적 학대' 공식 사과(5.6)/ 국제적십자위원회, '이라크내 교도소에서 자행된 미군의 가혹행위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혀/ 국제엠네스티, 이라크 포로 학살 '전범' 조사 요구/ 국내 27개 인권단체, 미군의 반인륜적 포로학대 규탄하며 "이라크에서 미군 철수, 한국군 파병 철회" 주장(5.7)/ 미국의 이라크점령 반대 이라크인 회의 바그다드에서 개막(5.8)

2. 꽃들에게 희망을, 아동에겐 인권을!

전교조 고양 초등지회 조사, 어린이 29.2% "인권 들어본 적 없다", 49% "체벌 경험 있다"(5.4)고 밝혀/ '한국의 범죄피해 실태에 관한 연구(이순래 원광대 교수)'에서 '부모의 학대를 받는 어린이 10명 중 7명, 일주일에 한차례 이상 학대 받는다'고 발표(5.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이대경 부장판사)'아동성폭력' 사건 법정진술 없이 비디오 진술로 유죄 인정, 가해자 법정구속(5.6)

3. 노동자의 삶은 고단하다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5.4)/ 전국타워크레인노조 500여명 100여 곳에서 타워크레인 점거 '고공농성' 돌입, △불법파견 금지 △근로계약서 체결 등 요구/ 근로복지공단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산재 노동자 46% 취업 못한 것으로 드러나(5.5)/ 타워크레인 노사 '표준근로계약' 등 합의/ 택시노동자, '정부의 사업주 위주 행정' 규탄하며 집회현장에서 분신(5.7)

4. 기타

강남구의회, 재산세율 50% 감면 조례안 만장일치 통과... 형평성·지역이기주의 비난 쏟아져/ 국가인권위원회 "경제력이 없는 말기암 수용자 치료비 교도소가 부담할 것" 권고(5.3)/ 검찰, '모내기' 그림 작가 신학철 씨에게 '열람 불허' 결정/ '서울광장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인권단체들,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화요캠페인 시작(5.4)/ 정통부, 사이버수사권 확대 시도... 인권사회단체 반발(5.5)/ 성남 주민들, 주민발의에 의한 시립병원설립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고 의회 방청을 거부한 성남시의회에 "행복추구권과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국제엠네스티, 코소보에서 인신매매와 연결된 성매매 이용자의 20%가 나토의 평화유지군, 유엔 코소보임시행정기구 직원이라고 발표(5.6)/ 서울시, 노숙인에 대한 입원·수술비 지원 중단...노숙인 지원단체 반발(5.7)

<기사 처음으로>

<특별기고> 단죄 받아야 할 자 누구인가?

미국정부가 단순히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학대를 방임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고문과 학대를 지시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쿠바 판타나모에서 미 국방부와 법무부가 사전협의 아래 알카에다 포로들에 대해 20여가지 고문방식을 직접 시달리며 고문을 주도했으며, 이같은 방침이 이라크 수용소에도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게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고문과 학대가 이번엔 문제가 된 아브 그라이브 수용소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라크 전역의 수용소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해지고 있다.

학대와 고문...점령의 수단으로

그러나 이토록 분명한 사실과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이번 사건이 미국의 정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몇몇 관련 병사를 처벌하는 선에서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 심지어 "이라크 인들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고 실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주의"에 대해 혼수까지 하고 나섰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이번 사건에 분개하고 전쟁의 참혹함에 슬퍼하는 모든 이라크인들이 아무래도 뭔가 모르는 작자들이라는 식이다. 점령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학대와 고문을 지시한 당사자들이 몇몇 관련 병사들과 이라크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의 죄만을 묻지 말라는 식이다.

'미국식 가치'를 내세우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자신의 입맛대로 가공했던 장면이 비단 오늘날의 일은 아닐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 저지른 범죄조차 '인도주의'로 포장하고, 그래서 '범죄에서 미국정부는 자유롭다'라는 스스로의 확신을 부단히도 공인 받기 위해 노력한 게 미국 정부였다.

미국의 범죄, 반인도적 범죄로 단죄해야

아마 몇 해 전 국제형사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자 했던 미국의 여러 시도들을 기

억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알듯이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법정에 기소하여 심판 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상설국제재판소이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많은 이들이 반겼던 이유도 이처럼 전범을 단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제적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점에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미국정부는 "미국인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를 면책하는 특권"을 주장하기도 했고, "미국인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불처벌협정"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로마규정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의 비준을 내내 미뤄오다가 급기야 서명자체를 철회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었다. 이로써 로마규정이 명시하고 있는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의 여러 항목에,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1년여간 이라크를 점령하면서 저지른 여러 범죄들이 해당됨에도 책임자 및 관련 미군을 기소하기 힘든 상황이다. 단죄 받을 범죄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피해자는 수만을 헤아리는 데, 정작 단죄 받아야 할 당사자가 없는 기이한 현실.....

고문과 학대로 상처받은 이라크인의 고통은 어디에?

이런 생각 때문일까? 나는 이번 일을 두고 미국 대선 구도를 살피면서 럽스펠드의 경질가능성을 점치는 기사들을 볼 때마다, 혹은 "또 어떤 사진이 있을까?"라는 식으로 자꾸 궁금증을 유발하는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화끈거리곤 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과 존엄함이 걸린 일을 한낱 정치공학으로 치환시켜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설정에서는 고문과 학대로 상처받은 사람들과 이를 멎든 가슴으로 지켜봐야 하는 이라크인의 실 자리가 없어진다. 단적인 예로, 그 많은 신문과 방송들이 '수개월 전 일어났던 고문사실을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문제가 된 그 수용소에서 포로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혹은 "이번 일로 인해 이라크 사람들이 얼마만큼 상처받았는지" 진지하게 물어오는 기사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지난해 이라크에서 한국을 찾았던 수하드와의 만남이 떠오른다. 그때, 수하드는 비록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한 줄 희망에 기대어 굳게 일어서고자 하는 이라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했다. 그 때 본 비디오에서 일군의 젊은이들이 전쟁의 와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이라크인들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던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나는 이들의 희망과 몸부림이 여전히 격이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단죄하는 일에 우리가 가진 지혜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일이 최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기사 처음으로>

Bring the soldiers back home! - 군인을 집으로!

군복, 교복, 교련복을 입은 사람들. 국민체조에 맞춰 익숙한 듯 체조를 하던 사람들이 제복을 벗어서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집에 가고 싶어하는 지친 군인들, 부러진 총 등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반전·평화의 무대로 초대합니다.

- 일시 : 2004년 5월 15일 (토) 낮 2시~4시
- 장소 : 서울 혜화동 대학로 지하철 4호선 4번출구
- 주최 : 5·15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준비팀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5월 12일 (수)
제 257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생리 휴가 '여학생'도 필요하다
2. ▷ 즐거운 물구나무 ◀ 평등한 소통을 위해 버려야 할 것
3. '학교로 돌아오는 것이 사명이었죠'
4. <기자의 눈> 아라크 포로 보도 언론의 '잔혹극'

생리 휴가 '여학생'도 필요하다

전교조, 초·중·고 여학생 1천2백 여명 설문조사 발표

전교조 여성위원회는 11일 '전국 초중고 여학생의 생리와 학교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1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 1,26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로 여학생들이 생리로 인해 겪는 고통을 파악하고 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47.8%, 중학생의 27%, 초등학생의 12.1%가 '생리통이 심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많은 여학생들이 생리 때 요통·두통·어지럼증 등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63.2%, 중학생의 41.6%, 초등학생의 26%가 "진통제를 복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생리 때 어떤 배려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36.7%가 "병결로 처리하지 말고 공결로 처리해서 집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며 26.6%가 "귀가지치"를 21.7%가 "양호실에서 휴식"을 요구하는 등 90%가 넘는 여학생들이 안정적인 휴식을 필요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는 "생리에 수반되는 고통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성인 직장 여성들에게 생리휴가가 허용되고 있다"면서 "여학생들의 경우에도 생리로 인한 결석·조퇴·지각에 대해 생활기록부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공결로 인정해야 하고, 보건실에 온돌, 전기온돌, 찜질 팩 등 생리통을 완화할 수 있는 설비와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칩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는 생리대 생산 및 유통업체가 생리대를 학교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생리통이 10~20대 여성에게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을 결근하게 하는 가장 많은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사춘기에서 1차 생리통은 생리시작 직후 2~3년 동안 대체로 나타난다"고 전했다. 생리통이 성인여성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씨는 "몸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고 학생들에게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하여 생리통으로 인해 고통을 겪을 때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씨는 '티부'나 '금기'처럼 여겨졌던 '생리'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성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그 주된 내용으로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교육하며 생리통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생리통으로 인하여 등교하지 못할 경우 '개인적 사유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되어왔다. 몸의 차이가 어떤 측면에서는 차별을 불러온 것. 결국 이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당국이 여학생들의 건강권에 주목하여 적극적 조치를 실천해야 한다는 요구는 늦었지만 주목해야 한다. 여학생들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했던 그간의 관행에 중지부를 찍을 때이다.

<기사 처음으로>

▷ 즐거운 물구나무 ◀ 평등한 소통을 위해 버려야 할 것

나는 흔히 말하는 복학생이다. 돌아온 학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다. 하지만 후배들을 만나면 변치 않는 거북함이 느껴진다. 후배는 묻는다. "몇 학년이세요?" 학년을 간신히 확인하면 경건한 표정을 지으며 한마디 한다. "말씀 낮추세요" 대학이라는 곳 역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나이를 따지지 못하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곳인 것이

다.

복학을 앞둔 즈음에 나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관계로 소통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었다. 많은 후회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처음엔 관계의 평등 운운하며 반말하다가 선배들에게 써가지었다고 맞을 뻔도 했고, 그래서 존댓말로 바뀌보니 후배들이 불편하다고 어색해 한다. 하루에 열 번은 '말씀 낮추라'는 '몸돌 바 몰라하는' 후배들을 보게 된다. 나 역시 적당한 호칭을 찾지 못해 아무개 씨, 아무개 군, 아무개 양이라 부를 때마다 후배들로부터 느끼하다는 편지를 들곤 한다. 밥 사주기 싫어서 존대한다는 촌철살인적(?)인 비난도 받았다.

추측하는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나의 소신은 간단하다. 소통이 위아래가 생기면 관계도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이를 너무 간단히 생각한다. 하지만 무엇이든 즐 세우기를 즐겨하는 우리 문화의 근본에는 보는 것마다 자잘하게 나눠서 위아래 파악을 해야 소통이 가능한 왜곡된 언어체계가 있다. 어찌면 우리는 군사문화의 창달에 가장 어울리는 언어체계를 지닌 민족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빛나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부분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

평등한 소통관계로의 전환은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말할 때 우리는 서로를 비로소 존중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 굳이 서로 존댓말을 쓰지 않고 반말을 쓰더라도 호칭을 바꾸면 관계의 평등은 금새 이루어진다. 오빠, 누나, 선배에서 아무개 씨로의 전환은 펜시리 생긴 위계의 거품을 털어 낸다. 가장 친밀한 연인사이에 서로 답살스러울 것 같던 존댓말은 누가 누구를 지켜주는 관계를 벗어나 서로에게 갈 은 크기의 존중을 선물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여전히 내게 숫자를 물어온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나이와 학년이 별로 궁금하지 않다. 당신도 내 나이와 학년에 대한 거 의 본능적인 궁금증을 거두어 주면 좋겠다.

<기사 처음으로>

"학교로 돌아오는 것이 사명이었죠"

용화여고 진용용 교사 복직 돼

"용화여고 국어 교사입니다. '바리태기'가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녹음된 것이 있으면 구할 수 있을까요?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직접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인터뷰 중에 걸려온 휴대전화의 내용은 교과 수업과 관련된 것이었다. "오랜만에 학교에 나와서 그런지 의욕이 더 많이 나네요"라며 환하게 웃는 진용용 교사의 미소는 9개월 만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학교와의 싸움. 결국 그 해 10월 학교측의 파면 징계로 학교를 떠나야 했던 용화여고 진용용 교사는 교육청의 재심 끝에 4월말 복직 통보를 받았다.

수업을 시작한 지 3일째. 진 교사는 "복직을 통보 받고 무척 기뻐졌지요. 그 동안 농성과 단식 등으로 몸도 마음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거든요"라며 지난 일들을 떠올린다. 파면 이후 학교 운동장 옆에서 한 겨울 농성을 벌였던 진 교사는 법원의 철거 명령에 농성을 접어야 했고, 교육청 앞에서는 사태해결에 나서지 않는 감독기관의 방관자적 태도에 대해 또 다시 단식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진 교사 파면의 표면상 이유는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우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진 교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비난이 그치지 않았다. 진 교사는 교육청 계시관을 통해 교내 문제를 고발했던 허성혜 학생에 대한 학교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했고, 학교의 예결산 문제를 지적해왔다. 눈에 보이지 않은 교사에 대해서 일단 파면이라는 징계부터 해놓고 사후처리를 하는 사립학교 재단의 막강한 권한은 비리와 부당한 조치에도 침묵을 강요하는 근원이다.

진 교사는 "학교로 돌아 와야한다는 것이 부담이면서 또 사명이 됐다"고 말한다. 불합리한 것에 대한 정의로운 목소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끝날 경우 수백명의 용화여고 학생, 학생들의 친구, 부모님 등 수천명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무엇이겠냐고 묻는 진 교사. '불의를 보아도 나서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는 결코 납득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2001년 노조를 결성하고 활동을 시작한 후부터는 담임을 맡지 못하고 있다는 진 교사는 "학교에서는 나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면서 '위장취업 했다'고까지 썼다"며 학교측의 굴절된 시각을 전한다. 허성혜 학생과 진 교사의 일을 거치면서 학교의 권위주의적 태도에 변화가 있었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하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할 일이 학교에는 여전히 많다. 세련된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며 웃어 보였다.

<기사 처음으로>

<기자의 눈> 이라크 포로 보도 언론의 '잔혹극'

최근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미군의 반인륜적인 범죄가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 잔혹한 장면의 확대 사진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누구나 이라크인 포로들의 인권과 미군의 가학성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아무도 사진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

언론사들은 선정적인 사진 보도에만 열을 올렸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 신원을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있다. 최소한의 '모자이크 처리'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연일 선정적인 사진을 내보냈다. 이러한 보도는 이라크 전쟁과 파병을 반대하지 않은 조선일보도 마찬가지. 인터넷중앙일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미군의 이라크 포로학대 갤러리'를 운영하며 '구경을 즐기는 듯' 하다. 한겨레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이들의 선정성에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듯 했다. 실제로 프레시안에서는 11일 한때 "개가 물고, 부상자 깔아뭉개고"라는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가 'BEST 클릭 기사' 첫 번째에 오르기도 했다.

이라크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안타깝게도 몇몇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드러났다. 미군의 반인륜적 범죄를 폭로하는 자리에서 등장한 사진들은 비록 그 자체가 진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언론과 마찬가지로 선정적이었고 피해자의 얼굴은 그대로 노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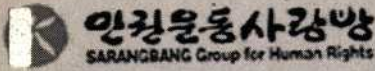
반면, 디지털 말의 입장은 주목할 만하다. 디지털 말은 6일 기사에서 "미국 CBS와 시사주간지 <뉴요커>는 이라크인 포로 성학대 사진 십 수장을 각각 공개했지만 이중 2-3장만 국내 언론에 게재된 것은 사진들이 지나치게 반인륜적이고 충격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자료가 너무 끔찍해 옮겨오지는 못하고 링크만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진을 통해 눈으로 확인되는 피해자는 존재하지만 이들의 고통스런 경험에 주목하는 언론은 많지 않다.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반전·파병반대 운동에 불씨를 지피야 한다는 주장은 피해자가 겪은 상처, 모멸감의 공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사진공개는 피해자인 이라크인 포로의 입장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5일 인터넷 뉴스타임즈는 이라크인 포로 하이더 사바르 아부드 씨가 사진 속의 두건을 쓴 인물이라고 밝히며, "아부드는 성적인 모멸감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너무도 수치감을 느껴 이라크에서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비단 아부드 씨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고문·학대 여부와는 상관없이 미군의 포로였던 이라크인들 모두에 틀림없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5월 13일 (목)
제 257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아이들과 지키는 평화의 약속
 2.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3. [알림] 인권운동연구소 월레토론

아이들과 지키는 평화의 약속

초등학교 교과 처음으로 병역거부... '5·15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팔루자 학살, 이라크 포로에 대한 고문가혹 행위 등이 연일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평화'의 불씨를 살리려는 소중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오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경북 문경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아래 병역거부) 선언을 하려는 것.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최진(27세) 씨는 입영 일을 3을 앞둔 15일 대구교육대학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현역 교사가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씨는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더불어 지금의 병역의무가 아이들에게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신념과 어긋난다는 것을 병역거부 선언의 이유로 들었다.

병역거부의 뜻을 밝히는 글에서 최 씨는 "전쟁의 공포에 떨게 될 이라크 사람들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올리며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이들 앞에서 가눌 수 없는 부끄러움과 분노가 솟아올랐다"며 "아이들과의 약속을 이제는 지킬 때가 왔다"라고 교사로서의 병역거부 신념을 밝혔다. 또 "너무나 많은 학교 안에서의 군사문화가 아이들에게 폭력의 씨앗을 심는다"며 "병역거부는 군대와 전쟁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폭력과 사회의 폭력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병역 문제가 단지 군대와 전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역설했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1981년 처음 개최된 세계병역거부자회의에서 유래된 것으로 매년 5월 15일 전 세계에서 공개토론회, 철야농성, 시위, 세미나 등 병역거부를 주장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이 펼쳐진다. 올해는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등지에서 전쟁저항 자인터내셔널 등의 주최로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행사가 개최된다.

한국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행사가 진행된다. 15일 낮 2시부터 서울 대학로에서 5·15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준비팀 주최로 "군인을 집으로!" 캠페인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행사는 군복, 교복 등 갖가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국민체조를 한 후 제복을 벗어 던지는 퍼포먼스로 시작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최정민 집행위원장은 "군인을 집으로! 행사는 이라크 파병과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평화에 대한 두 가지 화제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이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 씨는 제복을 벗어 던지는 퍼포먼스에 대해 "우리가 제복이라는 형태로 일상에서 만나는 군사문화를 보며 전쟁과 군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기획했다"며 그 뜻을 풀이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쟁의 끔찍함이 일상의 화제가 된 최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외치는 반전평화의 목소리는 적지 않은 사람의 공감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처음으로>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2002년 10월 26일 서울지검 특수조사실에서 살인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

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사의 지시로 밤샘 수사, 고문 수사 끝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검사는 구속되었고, 이후 특수조사실은 폐지됐다.

자백은 왕?

그러면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일까? 지난해 6월 대한변협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위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피의자 심문조서에 대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여겨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과도하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검사는 가혹행위를 가해서라도 자백을 강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에 적극적인 입증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자백을 받기 위해서 행해지는 수사단계에서의 강압, 밀실수사와 고문을 방지하여 위법수사관행이 없어지고,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에서 탈피하여 과학수사에 의한 증거위주의 수사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더해 김철준 변호사는 "위법한 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 능력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위법하게 수집된 제1차 증거(독나무)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열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독(毒) 나무 열매이론'을 들면서 "(피고 측에서) 불법으로 취한 증거임을 밝히며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증거로 인정해 버리는 법원의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위법한 행위를 통한 자백이나 증거는 모두 배제되어야만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근절될 것이고, 이럴 때 '자백은 왕'이라는 미신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공소 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도 보장되어야

이와 함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의 보장 문제도 형사소송법에서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무죄 추정을 받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재판에 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방어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재판기일 전에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검사는 공소 제기 후 재판기일 전까지 수사기록을 법원에 넘기지 않는 것이 관행이고, 이럴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장 외에는 피고인이 진술한 기록조차 보지 못한 채 재판기일을 맞는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수사기록의 열람을 검사에게 요구하지만, 번번이 묵살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급히 기록을 보기 위한 방법으로 보석을 청구하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이런 관행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1997년 다수의 의견으로 "검사가 아무런 거부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 뒤에 검사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고, 특히 올해 초 법무부가 개정한 '인권보호수사준칙'에 "검사는 공소 제기 후 증거 제출 전의 단계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보조인이 기록을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수사 기밀의 유지나 사건 관계인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소 제기 전'에는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없느냐의 점에 있다.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을 변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라도 알아야 하지만 현재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영성 부산대 법대 교수는 "현실적으로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유죄 입증을 위한 모든 자료가 수집되고 이것이 공판에서 별 이익없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을 공소 제기 이후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어 민교수는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위한 변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권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공소 제기 이전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컴퓨터 디스크 등에 대한 규정도 필요

이와 함께 "사진·녹음테이프·자기 테이프·컴퓨터 기억매체 등 컴퓨터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아무런 해석 지침을 주지 못하므로 명문 규정의 신설이 요청된다. 이들 자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특별조항이 신설되어야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앨 수 있다.

아직 우리는 이런 점들에서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당사자주의,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검사에 비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든 너무도 열악한 지위를 갖고 있을 뿐이다. 무죄 추정을 받아야 하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자신을 방어할 무기를 제대로 쥐어주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알림] 인권운동연구소 월례토론

· 제목: '감옥과 인권운동'
· 일시: 14일(금) 저녁 7시 30분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5월 14일 (금)
제 257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안한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국보법 폐지 그날까지 멈출 수 없어'
2. 클릭! 인권정보자료 「선거는 민주적인가」
3. 성년 얼굴로 돌아 보라, 전쟁의 진실들
4. 청송감호소 수용자 자살
5. 제8회 인권영화제 해외 상영작 소개
6. 인권활동가 1인 시위 중 경찰에 연행

'국보법 폐지 그날까지 멈출 수 없어'

국회 앞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 1년

국회 앞 '국가보안법 폐지 1인 릴레이 시위'가 1주년을 맞았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바람이 불거나 햇볕이 따갑더라도 지난해 5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약 15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거의 매일 국회 정문 앞을 지킨 것이다. 횃수만 '253회'. 1인 시위에 동참한 사람들의 면모도 다양하다. 86세 고령의 할아버지, 종례를 끝나자마자 달려온 16세 고등학생, 회사택시를 세워두고 1인 시위에 참가한 택시운전기사,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참가한 직장인, 청송보호감호소 가출소자 등. 이들은 한결같이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 야만을 가져왔으며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피켓을 세우고 거리로 나섰다. 1인 릴레이 시위를 주최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위 1주년을 맞아 13일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 한마당'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의지를 다시금 다져나갔다.

지난 3월 탄핵정국 속에서 1인 시위를 했던 택배노동자 유동성 씨는 "내가 피해를 입었던 안 입었던 간에 국가보안법은 몹쓸 법이다. 지금 이렇게 조용하지만 언제 또 풍동이 불어서 이 사회를 어둡게 만들지 알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지 그러한 상황은 일어날 수 있다"며 폐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권오현 회장은 "과거에 비해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구속자가 줄었다고 해서 칼날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난해만 해도 송두율, 민경우, 아주대 학생들, 11기 한총련 등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을 볼 때 국가보안법이 틀만 있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씨는 "개정이나 대체입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으며 "사회안전법의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보안관찰법이 또 다시 인권침해를 낳고 있듯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대체입법이 만들어지면 똑같은 인권침해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98~99년 국가보안법 개폐운동이 고조에 이른 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즈음 '국가보안법 폐지 1인 릴레이 시위'는 우리사회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관심을 계속 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되기 위해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다양한 단위에서 활동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폐지운동이 구체화 될 것"이라며 "1인 릴레이 시위의 결과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큰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 처음으로>

클릭! 인권정보자료 「선거는 민주적인가」

제비뽑기가 가장 민주적이라고?

지은이: 버나드 마넵/ 옮긴이: 박준혁/ 펴낸곳: 후마니타스/ 302쪽/ 2004년 4월

제목을 보고 대의제의 한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기대한 독자라면 아마도 책의 내용에 실망할 듯 싶다. 도발적인 제목과는 달리 이 책은 대의제를 넘어서자는 직접적인

주장을 내놓지 않는다. 다만 애초 민주주의와는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됐던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자리잡게 된 과정과 그 작동원리를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데 집중한다.

흔히 사람들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의 차이를 국민 소환권과 발의권의 보장 여부에서 찾는다. 그러나 저자(뉴욕대 정치학 교수)가 보기에 직접민주주의가 대의제와 구분되는 결정적인 차이는 통치자의 '선발 방식'에 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행정관, 시민 평의회 위원, 판사와 배심원 등을 '추첨'(제비뽑기)을 통해 무작위로 임명했다. 자격없는 시민이 공직에 앉게 될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인들이 200년 동안이나 추첨제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추첨을 통한 통치자의 끊임없는 교체만이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간극을 좁히고 전문가 집단에 의한 권력 집중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답한다. 또한 추첨은 원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통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동일한 확률을 보장하기에 민주적이고 평등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 추첨제도는 근대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갑작스럽게 그리고 조용히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반민주적이라고 여겨졌던 선거의 절대적 지배가 확립됐다. 저자는 '동의'야말로 합법적 권위의 유일한 근원이며 정치적 복종의 근거라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었던 자연법 이론의 역사적 승리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추첨은 동의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선거가 역사적으로 승리하자 민주주의는 권력에 대한 인민의 동의로 축소되고, 대표를 선출한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더 뛰어나야만 한다는 '탁월성의 원칙'이 작동된다. 선거는 결코 공직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치 엘리트들과 시민의 간극을 해소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선거는 모든 시민에게 통치자를 임명하고 책임할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며 대표가 여론에 어느 정도 구속되도록 만드는 민주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듯 이 책은 선거의 야누스적 성격을 면밀히 그려내는 동시에 추첨이라는 잊혀진 민주주의 실현 방식을 환기시킨다. 민주주의의 확장은 '선거+무엇'으로 실현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추첨과 같은 '선거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실현되어야 하는가? 더 많은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쉽게 풀리지 않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성난 얼굴로 돌아 보라, 전쟁의 진실을

긴급토론회, "파병 철회, 머뭇거리 필요 없다"

'정의로운 전쟁'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미국은 인권을 앞세워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리어 인권의 이름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팔루자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이 이 전쟁의 진실을 웅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민간인이 이슬람저항세력에게 보복 살해당하는 장면은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13일 이라크평화네트워크와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라크인 수감자 학대 및 팔루자 학살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주목을 끌었다.

지난해 11월에 이라크를 방문했던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임영신 씨는 "이라크인들이 아부그레이브 감옥에 왜 수감됐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8000명 가까이 되는 수감자들이 대부분 일방적으로 미군에 의해 '피의자'로 규정되었는데 그 중 많은 수의 사람들이 무혐의 민간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모든 논의가 '성공론' 학대로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에 반대하며 '팔루자 학살'도 전쟁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것을 요구했다.

민중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석태 변호사는 "팔루자 민간인 학살은 제네바 4협약 '점령지역 민간인의 생명, 신체, 재산권 및 자유 존중'에 위배되고, 이라크인 포로 인권침해는 제네바 3협약 '포로는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함' 모든 경우에 신체와 명예를 존중받아야 함'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미군에 의한 팔루자 민간인 학살과 이라크인 포로 학대는 국제법·국내법으로 형사처벌·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씨는 베트남전 당시 버트란트 러셀이 미국을 민간법정에 세움으로써 전쟁의 부당함을 폭로한 것처럼 이라크전의 경우도 민간법정을 통해 미국을 심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토론회에서는 우선 정부의 파병조사단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재정 코넬대 교수는 국군 3천명의 생명과 안위가 걸려있는 조사를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으로 일관한 파병조사단의 부실조사와 허위보고에 대해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씨는 파병이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후 이라크의 지원을 위하여'라고 명시한 국회 파병동의안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현재 이라크의 상황은 분명한 '전시 상황'이라는 것. 따라서 정부는 파병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파병을 결정할 당시 논쟁의 주요한 쟁점이 되었던 '국익론'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쏟아졌다. 하지만 그 어떤 비판적인 견해에 앞서 현재의 비극적인 상황은 어떠한 '국익'도 인간의 생명 및 존엄성과 맞바꿀 수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단 며칠 사이에 수백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하고, 가해자로서도 피해자로서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버젓이 저지를 수 있는 것은 이라크전쟁의 특수성이 아니라 바로 '전쟁' 일반의 속성이다. 이런 점에서 '팔루자 학살은 노근리 학살과 같은 상황'이라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지적은 '전쟁'에 대한 역사적 통찰의 결론일 수밖에 없다.

<기사 처음으로>

청송감호소 수용자 자살

청송감호소에 수감중이던 수용자가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다. 청송1보호감호소측은 13일 오전 5시 45분경 수감중이던 피보호감호자 박아무개 씨가 자살 기도한 것을 근무 중인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발견 당시 수용거실내 화장실 쇠창살에 자신의 린넨셔츠를 찢어 만든 끈으로 목을 맨 상태였다. 박 씨의 유서는 쓰레기통에서 구겨져 찢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에 따르면 박 씨는 유서에서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함께 구금시설과 교도관들의 처우에 대해 비판했다고 한다.

유족들은 "최근의 서신왕래 등에서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현재의 가출소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올해 내에는 석방될 수 있을 거라며 매우 들뜬 상태였다"며 "자살인 것은 분명하겠지만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는 감호소측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부검은 14일 오전 10시 유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제8회 인권영화제 해외 상영작 소개

팔레스타인 저항 다룬 개막작

예년의 저항학교, 개막작 <아나의 아이들>

올해 인권영화제는 이스라엘의 점령지 예년에서 시작된다. 이스라엘 점문소 앞을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 '팔레스타인 스카프'를 두른 한 여성은 운전자들에게 경적을 울려, 이스라엘 당국의 횡포에 항의하라고 소리친다.

개막작 <아나의 아이들>의 주인공 중 하나인 좌파 활동가 아나이다. 그녀는 예년에서 집과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연극을 통해서 '저항'을 가르쳐 온 인물. 감독은 아나와 함께 연극을 가르친 아들 줄리아노이다. 아나가 암으로 죽고, 예년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공 역시 그치지 않자 연극학교도 문을 닫는다.

작품은 연극학교와 함께 자랐던 아이들을 담은 전반부와 2000년 감독이 '아나의 아이들'을 찾아가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 포화속에서도 활력이 있었던 연극학교는 폐허로 변했고 아이들은 중 대부분은 전사했다. 살아남아 저항군을 이끌고 있는 한 청년 역시 죽음의 전선에 서있다. 죽음이 난무한 비극이지만 영화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저항이 주된 열개가 된 흔치 않은 작품이다. 울부짖고 호소하는 무기력한 희생자가 아닌 억압에 저항하는 전사들이 이 작품의 주인공들.

'불행'하지 않은 <나의 혈육>

장애와 질병을 가진 아이들이 부모도 없이 그룹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룹홈의 엄마 수잔은 이름도 생소한 희귀병, 지체장애, 유전적 피부병을 가진 11명의 아이들과 왈차지결한 나날을 보낸다.

수잔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남포성 심유중이라는 희귀질환을 가진 사내아이 죠. 포악한 성격의 죠는 함께 사는 장애아들에게 집밖에서 겪는 차별과 천대를 고스란히 경험하게 해주는 '세상의 거울'같은 존재이다. 영화 <나의 혈육>은 이 그룹홈을 1년 동안 관찰하면서 거기서 매일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 장애에 대한 공포와 무분별한 선입견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이상 두 편은 시각장애인도 같이 감상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프랑켄슈타인 <기업>

기업에 대한 자본주의의 환상을 비판하는 방대한 영상보고서 <기업>도 이번 영화제의 화제작 중 하나이다. 산업화 이후 기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재 이유'를 의심받아온 적이 없는 무소불위의 가치. 기업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비꼬며 시작되는 이 작품은 GM과 HP등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의 전·현직 CEO들이 기업의 전도사로서 등장하는 한편 노엄 촘스키와 마이클 무어와 같은 비판적 시

선 역시 동향으로 존재한다.

마이를 무어가 자본가들을 기습해 곤혹스럽게 만들어 웃음을 선사한 것과 달리 이 작품은 기업이든 그 반대편이든 모두 스튜디오에 정중히 모셔 그들의 말끔한 말들을 담았다. 이들의 말과 말 사이, 방대한 양의 기업 광고와 영화장면, 뉴스 자료화면 그리고 재현을 재배치해 '기업이란 무엇인가?'의 답안을 작성하는데 성공한다.

자유로운 몸짓으로 <저항하라!>

2차 대전 중 만들어진 뉴욕의 '리빙씨어터'는 반전운동과 함께 성장했다. 극장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나 거침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몸짓으로 말하는 이들은 '시위'를 연극처럼 연출하면서 그 연극 속에서 집회를 이끌어 나간다. 영화 <저항하라!>는 이 극단에서 연기했던 감독이 초창기 기록화면을 비롯해 최근 반세계화 운동까지 리빙씨어터가 연기했던 '시위'를 다큐멘터리로 재창조해낸 역동적인 작품이다.

올해 인권영화제에서는 이상과 같은 다양한 이슈의 '해외일반상영작'이 모두 15편 상영되며 다음주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소개가 이어질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인권활동가 1인 시위 중 경찰에 연행

미군에 의한 이라크 포로 고문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인권활동가가 경찰에 연행됐다. 13일 낮 오후 1시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종로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오 사무국장은 "1인 시위가 대사관 앞 차량 흐름을 방해한다"는 경찰의 주장에 따라 경비계 경사가 안내하는 장소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자리를 잡은 지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사복차림의 종로 경찰서 외사과 형사가 오 사무국장에게 다가와 "비켜서라"면서 실랑이가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오 사무국장은 경찰에게 사타구니를 건어차이고 연행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공무집행방해'로 오 사무국장을 연행했고, 형사는 '먼저 뺨을 맞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허창영 간사는 "경찰이 요구한 공무에도 충분히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으로 1인 시위를 방해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미군에 의한 이라크 포로 고문·학대를 규탄하며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 등 27개 인권사회단체는 지난 10일부터 미 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